

# 우리 농업 누가 대변하나

■ 김 영 호 / 시사평론가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잊혀지고 있다. 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농업시장의 개방이 거론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농업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외국 농산물들이 밀물처럼 밀려오자 그 맛에 익숙해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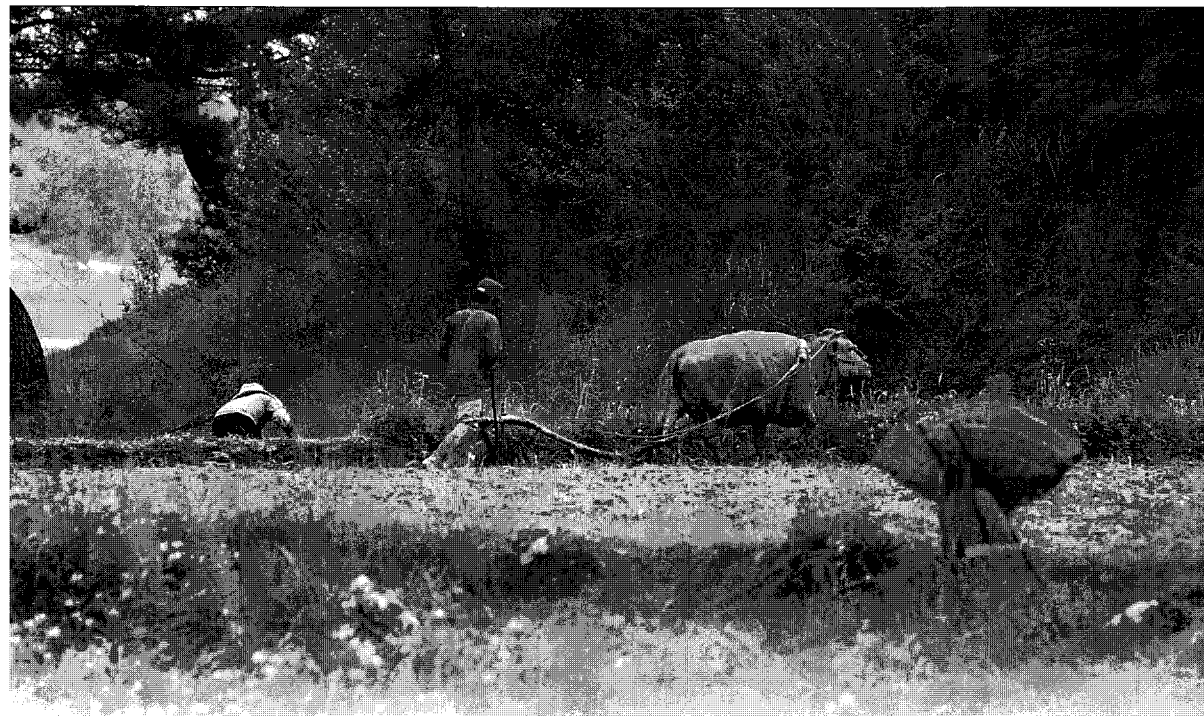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농업기반의 붕괴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부처 내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농업의 위상은 한없이 떨어졌다. 여기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자나 경제단체들이 가세하여 농업을 정부지원이나 요구하는 하찮은 존재로 몰아간다. 또 광고

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이 한 몫을 하고 있다.

## 언론, '농업 움직임·변화 의미' 못 담아

한국언론에는 농업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해 7, 8월에는 비가 정말 지겹게 왔다. 결실의 계절이라는 9월 들어서도 비가 멈출 줄 몰랐다. 그런 판에 추석이 가까워지자 채소류 값이 뚝 떨어지는 기사가 간간히 나왔다. 이어 농사를 망쳤다는 작황기사가 단발적으로 뒤따랐다. 황금 들판이 온데 간데 없는 그곳에 하늘도 무심한지 태풍마저 몰아쳐 할퀴고 지나갔다.

그런데도 언론은 농가피해를 수해기사의 한 토막으로만 다루는데 그쳤다. 온 나라의 농사를 망쳤는데도 말이다. 결국 쌀 수확량이 3,091만섬에 그쳐 2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 발표를 신문은 2~3단으로 보도했



고 방송도 아주 작게 처리했다. 그리고 재고 미가 많아 쌀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짤막한 해설까지 곁들였다.

쌀은 농촌의 주수입원이니 이것은 360만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한 해 농사를 망쳤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결국 농가부채가 그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다. 언론은 그 의미의 중요성을 해설기사와 함께 크게 다루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간과하지도 못한 채 묵살해 버렸다.

지난해 여름 굶은 날씨 탓에 추석도 잇은 채 비탄에 빠진 농촌에 떨리서 비보가 날아왔다. 농민운동에 일생을 바쳐 온 이경해씨가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화에 항거하여 자결했다는 소식이다. 언론은 사건기사로만 간단하게 취급했다. 그가 왜, 무엇을 죽음으

로 외치려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시장개방의 압력에 눌려 농민들은 질식할 것 같지만 아무도 그들의 절규를 들으려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화라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논리가 지금 세계의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 뒤에는 세계식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인 곡물메이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고인의 고향을 찾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한국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조명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눈물의 들판'이라는 르포기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한국 농촌의 비참한 모습을 담아냈다. 미국의 CNN은 그의 운구가 고향으로 간다고 전했다. 막상 서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의 곤봉세례였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그 폭력성도 못 본 척했다. 특히 신문이 말이다.

### 쌀자급 불구 자급률 26.7% 불과

작년 9월 WTO 각료회의가 열리자 언론은 농업시장 개방확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농촌은 직격탄을 맞는다. 초도화된다며 걱정하는 투로 나갔다. 막상 협상이 결렬되자 공산품 수출을 늘릴 기회를 놓쳤다는 식으로 아쉬워했다. 마치 농업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양 말이다. 일부 매체는 결렬의 원인을 한국 농업에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작년 연말을 전후하여 보인 언론의 보도 자세는 절망적이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

해서 먹는 게 싸다고 떠들면 그것을 받아쓰며 난리를 피웠다.

쌀 추가개방이 또 다시 농촌경제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절박한 문제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미풍도 감지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거에서도 언론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포기로 이어진다.

주수입원인 벼를 재배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다. 쌀을 자급하는데도 식량자급률이

## 비교우위론에 농업위상 크게 떨어져, 농업의 고마움 언론이 알려야 농업 위한 국민의식 변해야 농업 살고 농업기술 선진화 이룰 수 있어

정(FTA) 국회비준이 세 차례나 무산됐다. 지난 1월 8일 국회 안에서는 농촌지역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는 농민들이 상경투쟁을 벌여 비준을 막았다. 그러자 언론은 “금배지 때문에 국익을 버렸다”, “국회가 국익을 외면했다”, “표에 눈먼 ‘농촌당’ 의원들”, “세계시장서 한국 왕따 자초” 따위로 농촌지역 의원들에게 국익을 저버렸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항거하는 농민들을 국익을 모르는 과격한 집단으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협소한 시장에 수출해서 얻는 이득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피해를 따져 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이 나라 지도층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은 식량은 수입

26.7%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입 농산물에 밀려 쌀 말고는 뚜렷하게 짓는 농사가 없다는 뜻이다. 농업을 포기하면 농촌이 붕괴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영향은 막중할 것이다. 360만 농민은 생계가 막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세태는 정치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7대 국회에 농업전문가의 진출이 아주 미미하다. 거대정당은 아예 농촌표를 의식하지 않는지 거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는 전임 농림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직능대표의 성격을 지녔고 그 숫자도 크게 늘었지만 단지 3명만이 진출했다.

제1당인 열린우리당은 고작 1명만 당선권

에 들었고 민주노동당에서 2명이 진출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1명도 없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농업관련자가 최소한 20명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정당이 농업관련자를 공천하지 않으니 농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뽑을 수 없는 일이다.

### ‘식량안보 의식’ 지켜야 농업 살이

새 국회가 할 일은 많지만 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국회가 앞장서 쌀을 지켜야 한다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정부 내에서 농림부의 위상은 취약하다. 힘센 부처에 눌러 말도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작년 말처럼 이른바 식자들이 나서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이 양보해야 한다느니 하며 떠들면 쌀 협상은 하나마나다. 그런데 국회에 진출한 농업전문가들이 극소수이니 농업, 농민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쌀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려면 국민적 호응을 얻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언론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농업학자, 연구기관 등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대단체를 결성하자.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여 국민이 갖고 있는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또 정부를 상대로 압력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상설 사무국도 두고 필요한 비용은 모금 운동을 통해 건자. 왜 쌀을 지켜야 하는지 언론사에 기사를 부탁하고 학자들은 언론사에 기고도하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쌀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 소비증대를 위해 교회를 찾아 호소하고 자라는 세대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 순회강연도 갖는다.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수입농산물의 위해성도 널리 알린다.

농업이 지닌 환경보존기능이 얼마나 고마운지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대기정화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농업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소책자도 발행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너무 희박하다. 국가장래를 위해 국민교육 차원에서도 농업 살리기 국민운동이 꼭 필요하다. 통일에 대비해서도 농업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가발전전략이다.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강국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 농업을 살릴 수 있다. 아무리 시장이 개방되어도 국민이 사서먹지 않으면 농업은 살아난다. 그러면 농업을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희망도 주어 농업기술의 선진화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현실이 이대로 가면 누가 농업을 공부하고 누가 이 나라의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는가?

스위스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EU(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사서먹는다. 스위스를 배우자. **농약정보**